1월30일 Market Index
코스피 5224.36 (+3.11)
코스닥 1149.44 (-14.97)
금리(국고채 3년) 3.138 (+0.032)
환율(원·달러) 1443.50 (+17.2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삼성·SK 맞춤형 HBM 전략 제시 04

원가·소비자 가격 상승 기업 경영악화 '도미노'

'설탕세' 논란, 식품업계 촉각

당류가 일정량 이상 들어간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 부담금(설탕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식품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과 수익성 악화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성장 둔화와 고용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탕 부담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 의료를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제안한 것에서 촉발됐다. 설탕에도 담배와 유사한 방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사전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 이슈가 급부상했다는 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챗GPT가 생성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을 고민하는 이미지'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세" 제안
업계, 사전논의 없는 이슈 '당혹'
"저소득층일수록 체감부담 크고 식품업계에 막대한 추가 부담"

식품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격 인상 압박이다. 설탕 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가공식품과 음료 전반에 부담금이 부과돼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 특히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물류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원가 상승 요인은 기업 수익성을 더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탕은 소금처럼 소비를 완전히 줄이기 어려운 필수 원재료인 만큼,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물가 부담을 감안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지만,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면 시기의 문제일 뿐 가격 전가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공식품과 음료 소비 비중이 높아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설탕 부담금이 단순한 물가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한다. 원가 부담과 가격 인상으로 매출과 수익이 줄어들면 투자 축소, 경영 악화,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음료·가공식품 업체들이 설탕 사용량을 줄일 경우 제당업계 역시 거래 물량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에서 유사한 입법 시도가 있었던 만큼 업계의 경계심은 더 크다. 21대 국회 당시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업체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류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구조로 일반적인 콜라 1.5 l 한 병에 약 165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해당 법안은 업계와 관계 부처의 반대 속에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럼에도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재논의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12일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설탕 부담금 도입은 식품업계에 막대한 추가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외의 경우 설탕 부담금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 등 120여 개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효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덴마크는 2011년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가격 상승으로 인접 국가로의 원정 쇼핑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 1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다. 설탕 소비 억제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컸던 사례도 충분히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식품업계는 저당 트렌드 확산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탕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알룰로스·스테비아 등 대체 감미료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저당·무가당 포트폴리오 확대가 대표적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부동산 정상화, 5000피 보다 쉽고 중요"

이재명 대통령, SNS에 글 게시
"정부, 의지와 수단 가지고 있다 기회 있을때 감세혜택 누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1일에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 정치'를 하면서 부동산 이슈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1월 31일)과 2월 1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3차례나 올리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SNS에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p),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동산 탈레반' '호통 경제학'이라는 비난을 가하자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같은 날 밤 두 번째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며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1일 오전에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며 일부 언론이 부동산 투기의 편을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주일 사이 자신의 SNS에 8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지난달 23일엔 다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뒤 시장에서 부작용 우려 등 반발이 나오자 25일 하루에만 네차례나 글을 올렸다. 양도세 면제 연장을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이라며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같은 행보는 이 대통령이 SNS를 활용해 부동산 정책 이행과 여론전에 직접 뛰어들어, 투자 심리를 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 관련 메시지를 발신해 경고를 보내면, 시장의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

m-커버스토리

경제적 이익 22조… 남북 경협 출발점

'개성공단' 가동중단 10년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단체 10곳
5·24조치 해제, 공단 복원 요청
"합법적으로 기회의 창 열어달라"

지난해 12월30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이 철거 작업으로 인해 일부분만 남아 있다. 왼쪽은 지난해 10월 철거 작업 중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모습. /뉴시스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부의 강제 폐쇄로 전면 중단된지 오는 10일로 꼭 10년을 맞는다.

남과 북이 대화를 시작하고 평화의 다리를 놓기위한 미래의 초석이자 1순위는 남북 경제협력의 대표적 공간이었던 개성공단이 복원돼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 1순위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1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10년전 폐쇄 직전까지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했던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30~40%는 아예 문을 닫았거나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기업협회를 포함한 금강산기업협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등 10개 남북경협단체들은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 '5·24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5·24 조치는 2010년 당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 제재다. 이후 민간의 남북 교류협력과 교역은 전면 차단됐다. 뒤이어 UN(국제연합)의 대북제재도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5·24 조치는 남북의 신뢰를 끊고 평화를 닫고 우리 기업들의 경제적 활로를 차단했다"면서 "수많은 시민사회와 기업들이 마음껏 선민후관의 대북협력과 교류·교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통일부도 지난해 12월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 5·24 해제 조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길 염원하고 있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메트로 한줄뉴스

▲강훈식 "加 잠수함 수주, 쉽지 않지만 자신 있다…1년 내 결과" /사진 뉴시스

▲속도전 내몰린 '대전충남 통합'… 약칭 '대전시'에 벌써 '삐걱'

▲오세훈 "태릉CC되면 세운지구도 돼야…이 대통령 이중잣대"

▲조국 "혁신당 부채가 400억? 우린 0원…합당 음해 세력의 짓, 당장 멈춰라"

▲안철수 "6만호 공급대책의 성패, 민주당 의원들 이중성 최대 걸림돌"

▲정부, 상호관세 진화 '총력 대응'…조현 이번 주 방미